새만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색'

정운천 의원 발의 개정안 "'최장 100년 임대허가'등 내용… 새만금 발전에 박차를 가해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정운천 국회의원(새 누리당, 전주시을)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전체 개발계



획 면적 중 농ㆍ생명 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겪고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 · 용적률 등의 규 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새만금 특별법을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수 면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 청구기간 연 장 및 장기 임대 허용, ▲국내기업에게 국·공유지 장기 임대 허용, ▲새만금위원 회의 심의사항에 규제개선 추가, ▲산업단 지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장에게 부여, ▲오 수 및 폐수 지역의 토지 매수기간 연장 등 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새만금이 많 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 는 '최장 100년 임대허가'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며 "의미 있는 법안이 신속히 통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천도교중앙총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 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된 만큼, 새만금 발전에 박차를 가해 대 한민국의 미래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자료집을 직접 제작하고 새만금내 복합리조트의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매 회의 마다 새만금의 예산증액을 강조하여 남북

2축 도로사업비 314억원을 증액한 바 있으 며, 현재 정운천 의원이 구상 ·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위'도 새누리당 최고위 회 의에서 의결을 마친 상태다. /고민형 기자

이도영 "도내 소방관 특별승진제도 활성화 필요"

도소방본부 행감··· "예산 확보로 '플러스 근무제' 운영 · 심신안정실의 체계적 운영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박 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미 뤄지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에 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강제구인 해 검찰이 판단하는 적합한 시한 내에 대 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檢, 즉각 차대통령 강제구인해야"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검찰 이 최순실 등을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마지막 날이지만, 대통령은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 채 수사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은 사실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며 "출국금지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휴대폰과 대포폰 등을 주요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 사의지가 변함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 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내 소방관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승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전북도의회 이도영 의원(국민의당, 전주 2)은 지난 18일 실시된 전북도소방본부 행

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특별승진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규칙'제33조'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리는 규정이 있 음에도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특별승 진이 현장에서 구조 활약으로 특진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도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공무원에게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개선을 요 구했다.

전북 소방본부 예산부족으로 인한 플러

스의 근무제 미실시 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도내 119 지역대는 48개소 로 40개소는 2명씩, 8 개소는 3명씩 근무하 고 있다"면서 "'나홀 로 지역대인 곳은 없 다고 소방본부는 이



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러스 근무제'가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 아 '소방관 1명이 화재현장으로 펌프차를 운전하고, 소방 호스를 잡아야 하며, 동력 절단기도 작동시켜야 하는 1인 다역을 하 는 '나홀로 지역대' 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 악됐다"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소방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 을 확보해 '플러스 근무제'가 원활하게 운 영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수 많은 사고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는 소방공무원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고충에 대해 심신안정실의 체계적인 운영과 심신안정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운 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 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하루 빨 리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데 매진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 서도 더욱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 · 임실 · 순창)은 최근 버스 내 비상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 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 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 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 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 관광버 스 화재사고에서는 비상탈출용 망치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주 장과 함께 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강화유리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 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비상구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용호 의원은 "망치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 도 된다는 예외사항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라며, "비상용 망치나 비상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위급상황에 대 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형버스 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 다"며, "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탑승 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 박재호, 권은희, 장정숙, 박주현, 채이배, 소 병훈, 김종회, 김삼화, 김광수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추미애 "박 대통령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 돌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비 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이) 최종적 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 지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 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 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국 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 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 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하고 있 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 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야강당 공조 하에 법적·정치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1,000만 아니 3,000만이 촛불을 들 때까지 평화집회를 하겠다. 우리는 평 화집회와 준법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우겠다. 선 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또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조치를 계획하고 있 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대표는 박사모의 주말 집회 추진에 대해선 "공연 히 폭력을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테러한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음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만약 경찰이 불법을 방치하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 핵당할 것"이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